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창원 방위 ·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건의

2026. 02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 창원은 주요 방산기업들이 집적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국내 무기류 수출의 약 85%,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와 핵심 기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임.
- 특히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과 맞물려 원자력 발전의 설비 제조 및 유지보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실제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방위산업 분야의 첨단 혁신생태계 조성
과 원전산업의 ‘글로벌 SMR 제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10조 4,9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과 3만 8,00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 * 방위산업 : 약 5조 1,9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712명의 고용 창출
 - * 원전관련 산업 : 약 5조 2,99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83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2만 7,123
명의 고용 효과 발생
-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협력업체 및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임. 특히 경남 지역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23년 기준 약 4,264만 원으로 전국 평균 4,664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당 사업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K-방산 수출 확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그러나 지난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재심의 결정 등으로 인해 약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 특히 창원지역 제조업은 조성 50년을 맞은 기존 창원국가산단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 기존 제조 기반과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될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민들의 안타까움과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이에 구역계를 조정하는 등 환경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행정 절차가 지체된다면 이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질 것임.
-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을 막고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2026년 상반기 내에 ‘개발제한구역(GB) 국가전략사업’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남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2029년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임.
- 결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 조성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여 국가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핵심 열쇠임.

Ⅱ. 건의

- 국가 안보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GB)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2029년 착공이라는 목표를 기한 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26년 2월 4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홍 재 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	